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2. 4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이 일부개정('21.1.1. 시행)됨에 따라 시·도에서 구·군으로 사무 권한이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에서 구·군으로 이양된 사무 삭제(안 별표 2)

- 1)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개정(안전정책관)
 -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, 과태료 부과·징수
- 2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(버스운영과)
 -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,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, 구조·설비 등의 변경인가, 개선명령, 과징금의 부과·징수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: 불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50조 등 (불임)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0. 11. 20. ~ 11. 25.(5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2) 규제심사: 심사 대상 아님
- 3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5) 갑질영향심사: 개선의견 없음
- 6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안전정책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전정책관	1	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	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75조제2항제2호	
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2 중 버스운영과, 택시물류과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버스운영과, 택시물류과	1	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다.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라. 과태료 부과·징수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94조	
-----------------	---	---	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 2)				(별표 2)			
안 전 정 책 관	1	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운행정지명령 나.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. 과태료 부과·징수	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50조제2항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	안 전 정 책 관	1	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	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75조제2항제2호
버 스 운 영 과	1	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나.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.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라.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마. 구조·설비 등의 변경인가 바. 개선명령 사.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아. 과징금 부과·징수 자. 과태료 부과·징수	「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」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	버 스 운 영 과	1	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다.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라. 과태료 부과·징수	「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」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94조

관 계 법 령

□ 승강기 안전관리법(안전정책관)

제50조(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
1.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
2.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8.>

1.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2.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
4.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5.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
6.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
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0.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8.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<개정 2020. 2. 18.>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(버스운영과)

제39조(사용 개시)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8.>

제42조(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)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유지·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(是正)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
제43조(위치·규모와 구조·설비의 변경 등)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·규모 및 구조·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>

1.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: 시·도지사

2.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·설비 등의 변경: 시장·군수·구청장

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4조(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<개정 2020. 2. 18.>

1. ~ 6. (생략)

제88조(과징금 처분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., 2013. 3. 23., 2020. 2. 18.>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20. 2. 18., 2020. 3. 24., 2020. 6. 9.>

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09. 5. 27.>

1. ~ 7. (생략)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>

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·대상, 운용 계획의 수립·시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·도에서 구·군으로 사무권한이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영호